

“무거운 책임감... 일자리 개선 최우선”

정부,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 등 관련 절차 내달 발표키로

정부가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계획 확정 등 관련 절차를 1분기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기업들의 투자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취업자 수가 2개월 연속 한 자릿수 증가에 머무르는 등 고용 지표가 나빠진 가운데 일자리 여건 개선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으로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및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이날 오전 통계청이 발표한 올 1월 고용 통계에서 취업자 수가 2개월 연속 한 자릿수 증가에 머무른 데 따른 대책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취업자 수는 2623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8000명 늘어난 데 그쳤다. 2018년 1월 취업자 수 증감(33만4000명)보다 크게 낮은 수치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정 운영의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 여건 개선에 두고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해명 한 바 있다.

우선 기업투자프로젝트를 계속 발굴한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포함, 8조3000억원을 웃도는 규모의 1·2단계 프로젝트는 조기착공을 돕는다.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부처 합동으로 전담반을 구성, 3·4단계 투자프로젝트도 분기별로 발표한다.

기업들이 투자 애로를 손쉽게 건의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다양하게 운영한다.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유관부처 간 협업도 강화한다.

자동차 등 주력산업을 혁신해 기존 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 여력도 높인다. 3월 중 미래차산업 육성전략, 친환경·스마트산업 활성화 방안, 석유화학업계 투자 애로 해소방안, 차세대 디스플레이 발전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래차 핵심부품 기술개발지원, 친환경 선박 발주, 디스플레이 혁신공정플랫폼 구축사업 연

구·개발(R&D) 과제 기획 및 공고, 대산 첨단화학특화단지조성계획 등도 준비하고 있다.

신산업에서는 투자와 고용 측면에서 파급력이 큰 스마트산업단지·미래차·핀테크(Fintech)·바이오헬스 등 4개 업종에 재정지원과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서비스산업에서는 관광·보건·콘텐츠·플류 등 4대 유망업종을 중점 혁신한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에는 재정·금융지원과 각종 세제혜택 등을 담을 예정이다. 다만 노동자측은 적정 근로조건 제시, 사용자(기업) 측은 일자리 확대를 골자로 한 신규 투자계획 발표, 지방자치단체는 투자지원·각종 인프라 확충 약속 등 각 주체가 상생협약에 나서야 한다는 전제를 내세웠다.

경제활력대책회의 전 모두발언 등에서 홍 부총리가 직접 언급했던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방안의 세부사항도 나왔다. “2인 1조” 근무조 편성 등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시설안전 및 재난 예방 등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2만 5000명을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한다. 애초 계획(2만3000명)보다 2000명 늘었다.

이와는 별도로 체험형 인턴 채용 규모도 늘린다. 목표는 2018년 1만6000명보다 2000명 증가한 1만8000명이다.

수출의 경우 이달 말 ‘수출활력제고 방안’을 발표, 내달까지 콘텐츠 및 농·수산물 수출촉진, 전문무역상사 활성화, 스마트전자무역촉진방안 등 분야별 세부 지원방안을 차례로 발표한다. 또 건설·플랜트 분야의 해외수주를 돕는 범(凡)정부 차원의 ‘해외수주활력제고방안’을 마련, 14일 공개한다.

벤처창업 육성방안도 있다. ‘창업→성장→회수 및 재투자’ 생태계 전 과정을 보강한다. 2~3월에 걸쳐 민간투자주도형기술창업지원프로그램(TIPS) 250팀, 포스트(Post)-TIPS 20팀, 창업패키지 1700팀을 선정한다. 혁신창업거점이 될 스타트업파크는 내년 9월까지 조성한다. 2조8000억원 규모의 2019년분 혁신모험펀드와 3500억원 규모의 회수지원펀드를 올 7월까지 끝낸다.

또 1세대 창업가가 기업 매각대금의 50%를 1년 안에 후배 벤처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세 과세를 미뤄주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이달 중 완료한다.

/뉴시스



전북농협이 13일 지역본부에서 시·군지부 및 농·축협 농업정책자금대출 실무자 120여명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전북농협, 농업종합자금대출 실무자 교육 실시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13일 지역본부에서 농업종합자금을 집중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업은행 시·군지부 및 농·축협 농업정책자금대출 실무자 120여명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했다.

농업종합자금대출은 농업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채소·과수·화훼·축산업 분야와 농식품가공사업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에 필요한 각종 자금을 농협에서 소정의 심사과정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연중 수시 지원하는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이다.

전북농협은 2018년도에 2670여억원을 지원했으며 2019년도에는 농협은행 및 농·축협을 통해 2900여억원을 지원 목표로 사업추진 중이다.

농업인은 관내 NH농협은행 시·군지부 및 농·축협을 방문하면 농업종합자금대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장근 본부장은 “최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업인에게 필요한 자금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 밀묘소식재배 확대로 농가소득 제고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 노동력과 생산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소량의 육묘만으로 재배가 가능한 밀묘 소식재배를 시범포 운영, 3년간 경제성 실증분석·과종기 보급 등을 통해 올 해330ha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백산(김제시), 오산(익산시), 전주(전주시)농협에서 240ha의 논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밀묘소식재배는 신 영농기법으로 육묘상자 당 법씨를 300g 파종하여 육묘 3~4분씩 50주를 3.3m(1평) 정도 이랑에 재배하는 방법으로 기존 관행농법의 경우 1ha를

이랑 하는데 240여 상자의 모판이 소요되는데 비해 밀묘소식재배는 1/2정도인 80여 상자만 필요로 한다.

또한, 이랑기 1대에 모판 30~40여장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관행농법의 경우 논 주위에 모판을 흘려 놓고 다시 이랑기에 옮겨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져 노동력을 줄이고 편리함을 동반한 장점이 있다.

아울러 밀묘 소식재배와 함께 현재 농협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직파재배도 영농비를 절감할 수 있는 영농기법으로 이 또한 지역별 특성에 맞게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이 소량의 육묘만으로 재배가 가능한 밀묘 소식재배를 시범포 운영·3년간 경제성 실증분석·과종기 보급 등을 통해 올 해330ha로 확대한다.

부동산 간주임대료 이자율 2.1%... 2년 연속 올라

기재부, 개정세법 시행규칙 발표

국세 및 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2.1%로 올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 차례 더 인상됐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해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17개 시행규칙 중 하나로 이는 입법예고 및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중순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해 해당 이자율을 매년 조정해왔다. 이자율은 2012년 4.0%에서 2013년 3.4%, 2014년 2.9%, 2015년 2.5%, 2016년 1.8%, 2017년 1.6%로 5년 연속 내렸던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1.8%로 인상된데 이어 올해 2.1%로 한 차례 더 올랐다.

정부는 최근 시중금리 추이 등을 반영해 이자율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는 연 2.02%로 2년 연속 올랐다.

해당 규칙은 국·관세환급가산금에는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부터 적용된다. 간주임대료의 경우 지난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에선 입국장 면세점 판매 한도와 판매 제한 물품도 확정됐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 구역 대상 및 수출입 금지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을 판매할 수 있다. 판매 한도는 600달러이며 술과 향수의 경우 판매 수량이 각각 1병(400달러 및 11이하), 60ml로 별도 제한된다.

신성장 동력·원천 기술 연구·개발(R&D) 비용의 인정 기준도 완화한다. 재료비 등 R&D 공통 비용은 전담 연구 인력 인건비를 기준으로 일반 또는 신성장 연구개발비로 인분해 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기존에 일반 및 신성장 R&D에 공통되는 비용을 전액 일반 연구개발비로 간주했었다.

동시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사후 관리는 강화한다. 연구계획서, 보고서 등 R&D 활동 검증 자료를 작성하고 부과제척기간을 고려해 5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R&D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신청 시엔 연구과제 총괄 표도 제출해야 한다.

/뉴시스

정부, 감자 상시수급조절 시스템 마련... 작년 ‘金花’ 대란 막는다

지난해 작황부진으로 가격이 3배 가까이 올랐던 감자 대란을 올리는 막기 위해 정부가 감자 수매비축제도를 상시 제도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상시 수급조절시스템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기준 감자가격은 20kg당 4만 885원으로 평년대비 51.5% 가량 높은

수준에서 형성돼 있다.

지난해 700t 규모로 시범 운영했던 감자 수매비축은 올해 4000t 규모로 이뤄진다. 또 국내 공급불량 부족에 대비해 올해 국영무역 방식으로 5000t 수입물량을 운영한다. 올초 2000t을 도입하고 추후 수급상황을 봐 추가 운송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노지저수수급안정사업 대상을 현행

고랭지감자 위주에서 노지봄감자, 가을감자, 시설감자 등으로 전면 확대한다.

주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으로 감자 수산지협체도 구성해 산지 조직화를 유도한다. 쌀 중심으로 지원되던 ‘블랙경제육성사업’은 올해부터 감자 등 밭작물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뉴시스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